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후기①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 새로운 주체의 발견과 청년의 사회혁신

2015. 6. 5 | 민달팽이유니온 | minsnaion@gmail.com

주거문제는 정부 혼자, 혹은 민간의 특정 주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진 만큼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권 보장 역시 더욱 더 쉽지 않아졌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필요가 축적되어야 하고,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

5월 14일~16일 서울시, 서울연구원, SH공사, 세종대학교, 오사카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해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을 비롯한 대만, 홍콩,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거 관련 학자와 공무원,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주거문제를 발표하고,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노력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안 중 청년과 사회주택을 키워드로 본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슈진단은 총 2회 연재됩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 주거권 보장과 한국사회의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청년 단체입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 연구, 캠페인 등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달팽이집을 공급해 새로운 사회주택을 공급하고자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필자 주)

눈에 보이는 변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장,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각 도시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주거 복지 대안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의 첫 날 주최를 맡은 서울연구원의 김수현 원장의 축사 중 일부이다. 이번 주거복지 컨퍼런스는 서울·일본·대만·홍콩 등의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모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주거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사진을 함께 그리는 것과 동시에 각자의 현장에서 발견되고 있는 주요한 사례들이 지속가능한 모델로서, 복제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그림1.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웹포스터



출처 : 서울특별시

컨퍼런스에 참여한 4개 국가 및 도시들이 겪는 주거문제의 양상과 현안은 각기 달랐지만, 그간 유사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온 만큼 이들의 고민과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대안에는 비슷한 점이 많았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공공의 역할이 부재하거나 상당 부분 축소된 상황에서 민간의 자원과 활력이 공공과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주거모델이 이번 컨퍼런스의 주된 화두였다는 사실이다.

### 화려한 경제 성장 뒤에 있는 슬픈 그늘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적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체제에 후발주자로 진입한 국가들이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서구화와 자본주의를 보편적 가치로 지향하는 근대화 패러다임이 우위를 점했고,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채택했던 것이 바로 발전국가 모델<sup>1)</sup>이다. 즉, 강한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을 조정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것이다. 그 결과 아시아의 네 마리 용(한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 또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말을 탄생시키며 단시간에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한국의 경우 1970년대 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였고 외환위기를 겪었음에도 2000년대 전까지 평균 5% 이상의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1) 발전국가모델은 자본주의 이론으로 서구의 시장 합리적 규제 국가와 사회주의국가의 계획 이념에 대비되는 제3의 유형인 계획 합리적 개입국가를 말한다. 이는 당시 경제발전을 설명하던 근대화이론, 신고전주의 발전론, 종속이론의 한계를 뛰어넘어 동아시아 성장에 관한 가장 유력한 설명을 제시하며 후발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전략적 시장개입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화려한 경제 성장 뒤에는 그들이 있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가 경제성장이라는 이유로 아주 쉽게 무시되었던 것이다. 특히 전후 한국은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에 시달렸고 국가가 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이전 달동네는 사실상 국가가 용인한 무허가 주택이었다.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집이었지만 사람들이 저렴한 값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거처였던 것이다. 시간이 지난 후, 이러한 달동네들은 낙후 지역이라는 이유로 주택개량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의 이름으로 포장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해 강제철거를 당하게 된다. 도심 주변의 일거리를 찾아 모여드는 사람들에 의해 도시 빈민들은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고, 강남 개발이 시작되고 나서는 점점 더 멀리 떠나게 되었다. 서울 중심의 많은 달동네는 없어졌고 대신 고층 빌딩과 대형 아파트가 들어섰다. 이 아파트들은 대부분 중산층을 위한 고층 아파트였기에 그동안 거주했던 사람들, 즉 저소득층은 저렴한 주택을 찾아 계속해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의 미관은 좋아졌을지언정 수많은 사람들의 주거권은 박탈되었다. 1971년 일어난 광주 대단지 사건<sup>2)</sup>은 이러한 국가의 폭력적인 개발 사업이 낳은 아픔이자 잃어버린 주거권의 현상이었다.

### 다양한 양상의 주거 문제, 더욱 더 심화된 주거불평등

경제성장 시기에는 국가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거권이 박탈된 사람들의 문제, 즉 철거가 주된 주거 문제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좀 더 다양한 양상의 주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자가소유를 촉진하는 정책을 주로 써왔다. 물론 잔여적으로 극빈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도 해왔다. 하지만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 또는 조정의 역할은 등한시되었고 은행과 함께 주택 대출 상품, 분양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서울의 경우 자가율은 한 때 71%까지 치솟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떨어져 현재는 41%에 그치고 있다. 100%가 넘는 한국의 주택보급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자가율은 그만큼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한국은 1989년이 되어서야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시작했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다보니 공공임대주택 입주하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주민 반대가 일어서자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수요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시도했다. 이에 1990년대 후반부터는 소득 8분위까지의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공급되고는 있지만 그 절대량이 적어 많은 사람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마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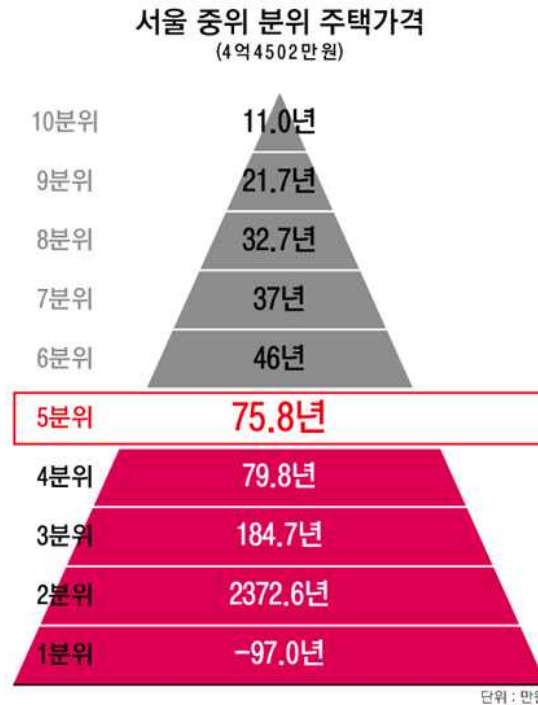
2) 1971년 8월 10일 경기도 광주대단지(지금의 경기도 성남시) 주민 수만 여 명이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하며 도시를 점거했던 사건. 1960년대 서울시는 철거민 대책 중의 하나로 정착지 조성을 통한 '이주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군 중부면의 일부가 광주대단지로 지정되었다. 1969년 9월 1일부터 철거민 이주가 이루어졌고, 서울시는 땅을 분양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반 시설을 전혀 조성하지 않았고, 이주민들은 상하수도 시설조차 없는 곳에서 천막이나 판잣집을 지어 생활해야 했다.



가지로 이미 높게 형성된 임대료와 불평등한 임대차 관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역시 미약한 수준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한 한국의 주택 가격은 빚을 내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중간 소득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울의 중간 수준의 주택을 저축으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75.8년이 걸린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게 되었고 무리한 대출과 주택 가격 하락, 그리고 오르지 않는 소득은 많은 사람들을 ‘하우스 푸어’ 상태로 몰아넣었다. 또한 집을 구입조차 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 역시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겪는 ‘렌트 푸어’가 되고 말았다.

그림2. 서울 중위분위 주택가격과 구입 가능 연수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2 / 국민은행, 주택 가격동향조사, 2012 (민달팽이유니온 재가공)

과거 개발 사업으로 인해 쫓겨난 사람들의 주거 문제, 금융 상품과 결합해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몰고 갈 때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아 생긴 다양한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의 문제 등은 결국 국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실패에 대한 해결책이 시장에만 존재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경우, ‘강한 국가’를 기반으로 발전해왔기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 역시 국가였다.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성장 경로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와 시장이라는 양극단에서 해결해야만 했고, 결국 시장에서의 주요 주체는 이미 형성된 대기업일 수밖에 없었다.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국가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대한 요구를 재정 부족과 재정 위기라는 이유로 포장했고, 민간 임대 시장에서 주택을 공급하면 자연스럽게 수요와 균형이 맞춰져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하여 주택 공급을 위한 세제 혜택, 용적률 완화 등 민간 건설사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지만 이들이 공급한 주택은 대부분 분양 주택이었고 이는 곧 투기의 수단으로 아주 쉽게 전환되었다.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해결책이 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듯, 정부의 정책 실패가 곧바로 정부의 존재 의미를 감소시키는 것 역시 아니다. 정책 실패의 원인을 찾고 여전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은 정부가 개선해나가면서 추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노동과 주거와 같은 인간의 삶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일 경우, 정부는 적절한 시장개입과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민간 주체들을 발굴해냄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시 말해, 국가와 시장이라는 줄다리기 속에서 새로운 민간 주체들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다.

### 새롭게 대두된 청년 주거 문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은 필수적인 삶의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삶 속에서 불안함을 높이는 요소로 변모하기도 한다. 이는 비단 한국 뿐이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불평등이 심화된 탓에 높은 주거비로 인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최근 이러한 사람들 중 특히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곧 주거 불평등의 한 단면이자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가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이는 한국을 비롯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신자유주의 역시 급속도로 받아들인 동아시아 국가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민간 주체들의 활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리하여 다양한 수요에 맞춘 주택을 어떻게 공급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

빈곤층 또는 노인의 주거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던 청년층의 주거복지 이슈는 매우 중요해졌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이주 노동자 등 새로운 계층의 주거문



제까지 나타나고 있다. 즉 주거문제가 소득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생애주기 등 다양한 층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주거복지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을 주제로 주거 문제를 알리고 새로운 해법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매매시장이 침체되면서 빠르게 주택시장의 주 무대는 임대시장으로 재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목돈을 모으기 힘든 청년들의 경우 대부분 월세로 살고 있으며, 월세는 청년들의 소득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상태이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세-24세 청년 중 74.8%가, 25세에서 29세 청년 중 47.8%가 월세로 살고 있다. 이전 세대들의 20대 시절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그림3. 방값 및 관리비 역전현상



출처 : 민달팽이유니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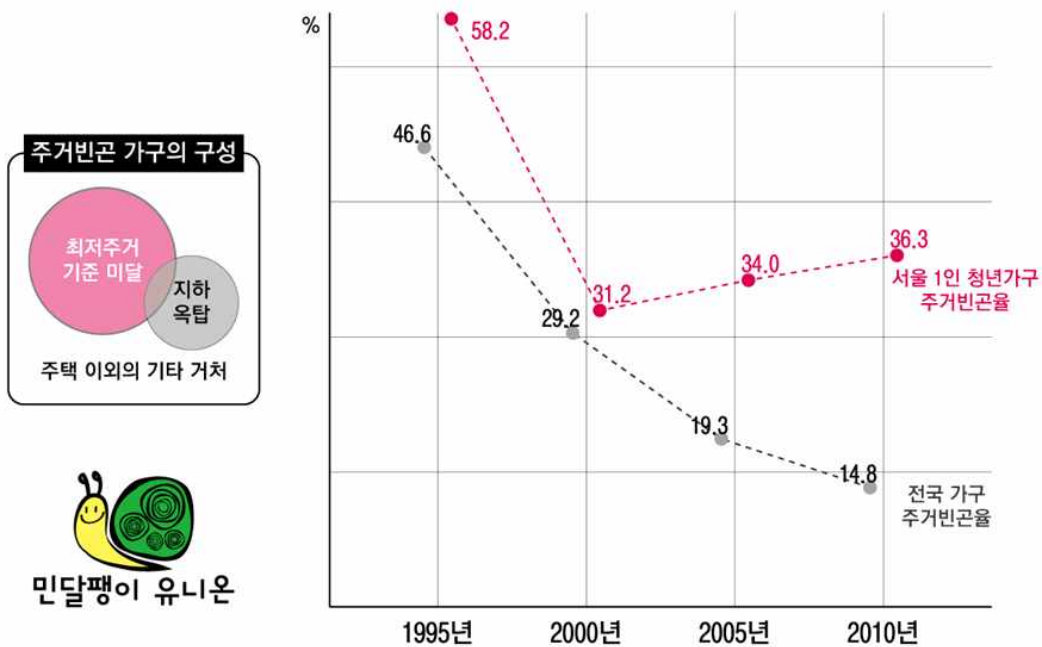
한편, 소형 주거지의 경우 대형 아파트보다 평당 임대료가 더 비싸다. 관리비 또한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 다가구의 원룸이 아파트보다 2배가량 비싸다. 이른바 <방값역전현상>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주거불평등을 고스란히 나타낸다. 쉽게 말해, 타워팰리스보다 고시원의 평당 임대료가 더 비싸지고 있는 것이다. 민달팽이유니온과 대학생주거네트워크에서 2013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타워팰리스 2차의 평당 임대료는 11만 8천원인 반면 고시원의 평당 임대료는 무려 15만 2천원에 달했다. 원룸 관리비도 마찬가지다. 민달팽이유니온에서 지난 8월 357명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의 평당



관리비보다 원룸 관리비가 2배 더 비싸다.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일수록 가격 결정이 집주인 마음대로 되는 경향이 높으며, 힘의 불균형과 비대칭적인 임대계약 관계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불안정은 가속화되고 있다.

비싼 만큼 집이 좋은 것도 아니다. 사실 집이라 부르기 민망한 곳에 대다수의 청년들이 살고 있다.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나타내는 통계가 주거빈곤율이다. 주거빈곤은 최저주거기준(14제곱미터 이상)미달이거나 반지하, 옥탑 또는 주택 이외의 거처를 의미한다.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빈곤율은 36.3%에 달한다. 전 지역, 전 세대에 걸쳐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대학가 주변 걸은 번지르르한 주택들의 내부를 살펴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불법건축물인 경우가 태반이다.

그림4. 전국가구와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민달팽이유니온 재가공

아주 얇은 벽을 하나 두고 다닥다닥 붙어 있으며 책상과 침대를 놓으면 밥상 하나 피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는 것이다. 청년들은 집이 아닌 방, 아주 좁은 방에서 내일을 조금씩 내어주고 있는 것이다.



## 민·관의 협력으로 풀어낸 새로운 해법, 이웃기웃 청년 주거협동조합과 달팽이집

이처럼 특히 최근 심각하게 드러나는 청년 주거 문제에 있어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대안적 해법을 도출한 사례도 있다. 민달팽이유니온과 새사연을 비롯한 민간 주체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SH에서 공급했고,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택을 스스로 관리한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주거모델이다. 공급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새사연, 민달팽이유니온, 소행주 등의 단체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았다. 이처럼 민간의 아이디어가 공공의 재원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이미 커뮤니티 형성의 경험이 있는 민간 주체가 입주자들의 협동조합 설립과 입주 및 주택 관리를 도왔다. 이웃기웃 청년 주거협동조합은 1인 1실로, 총 31명이 살고 있다.

그림5. 이웃기웃 청년주거협동조합



달팽이집은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 공급한 사회주택이다. 사회투자기금의 소셜 하우스 이용자사업을 지원 받아 사업비 일부를 저리로 빌리고 나머지를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출자금과 입주자의 보증금 등으로 채웠다. 청년들이 주로 겪는 비싼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 환경의 문제를 해소하고, 대개 집을 구할 때 생기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임대차 관계에서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달팽이집은 총 5세대에 17명이 살고 있는 공유주택으로, 청년들이 주거 공동체를 만들면서 삶의 풍성함을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그림6. 민달팽이유니온



이러한 민·관이 협력한 새로운 주거 문제의 해법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인 16일 토요일에는 위 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발표를 듣는 현장답사가 진행되었다. 30여명의 일본, 홍콩, 대만의 컨퍼런스 참가자들과 SH공사, 서울연구원, 서울시 관계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웃기웃 청년 주거협동조합과 달팽이집의 과정과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들었다.

####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회주택이 활성화되어야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주거문제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과 학술적, 경험적 대안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돋보였던 것은 마지막 날 현장답사에서 확인한 열기처럼 대안적 주거모델에 대한 관심이었다. 기존의 주택정책인 공공임대 정책을 확충하고 민간임대시장의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민간의 활력과 경험을 활용해 주거복지와 주거문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요구가 강해진 것이다.

정부와 시장이라는 양 극단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사회적경제 또는 비영리 분야의 주체들이 직접 주택 공급 또는 관리를 하는 새로운 주택 유형인 ‘사회주택’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저렴하게 토지를 빌려주면 민간의 주체들이 주택을 지어서 저렴하게 임대 사업을 하는 방법, 정부의 지원을 일부 받아 빈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잘 활용되지 않는 공공기관을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센터로 변경하고 지역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건물 일부를 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사회주택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사회주택이 지속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깊은 토론과 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필요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미 높아진 주택 가격과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민간 임대 시장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사회주택은 일시적 현상 또는 한시적 흐름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간의 활력과 경험을 공유하는 대신 정부는 모든 사람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더욱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사회주택협회가 출범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주식회사 등 저렴하게 임대사업을 하거나 사회주택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민간 주체들이 모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직은 자산이 취약하지만 현장에서 새로운 해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청년 기업, 청년 협동조합 등이 많이 참여했다는 데에 있다. 가장 절실한 이들의 손에서 새롭고 빠르게 대두되고 있는 이 흐름은 비단 청년들끼리만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함께 만들어내고 새로운 주체들의 형성을 있는 힘껏 도와주고 있는 기존의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주거문제는 정부 혼자, 혹은 민간의 특정 주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진 만큼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권 보장 역시 더욱 더 쉽지 않아졌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필요가 축적되어야 하고,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는 앞서 말한 정부와 민간 주체들의 힘과 끈끈한 유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던 시간이었다. ▶



##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5년 6월 5일 현재

아젠다	발간 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①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②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고용,노동	3/19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강세진
보건,의료	4/9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
고용,노동	4/16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고용,노동	4/21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 모든 것 : ①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상동
고용,노동	4/28	감춰진 제3의 지표, '체감 실업률'	송민정
경제	5/7	법인세의 모든 것 : ②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이상동
주거	5/14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사업, 아직은 시기상조	진남영
고용,노동	5/18	2015년 4월 노동시장 분석 :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 및 규모	김수현
고용,노동	5/21	노동자가 소비자다 : 떠오름과 빈곤의 역학	이정아
주거	6/5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후기①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 새로운 주체의 발견과 청년의 사회혁신	민달팽이 유니온